"견제와 균형 역할…호남의 눈물 닦겠다"

새정치 2·8전대 최고위원 경선 1위 당선 주승용 의원

문대표, 박지원 의원부터 만나야
亞특별법 원안통과에 모든 노력
文 박정희 묘역 참배 긍정적 평가

새정치민주연합 2·8 전당대회에서 주승용 의원(여수 을)이 최고위원 경선에서 1위를 차지, 호남 정치의 자존심을 살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주 최고위원은 비노·호남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에서 범친노 성향의 지도부에서 견제와 균형을 실현하고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십을 보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광주일보는 9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주승용 최고위원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과 각오를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 최고위원 경선 1위를 차지했다. 가장 큰 동력은.

▲민심과 당심이 균형과 견제를 요구했다고 본다. 특정 계파의 독점 구도를 막으라는 명령이다. 여기에 호남 대표성을 띠고 있는데다 유일한 지방 후보라는 점도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초반 인지도가 낮았지만 전국 투어를 진행하면서 저의 진심을 알아주신 것 같다.

- 경선 과정에서 나타난 호남 민심은.

▲전국을 돌면서 호남의 소외, 호남의 눈물을 닦아달라는 요구를 가슴으로 느꼈다. 호남의 인물을 키워야 한다는 흐름도 있었다. 호남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한 명 정도는 있어야 한다는 공감대도 확인했다.

- 새정치연합의 최대 과제는 통합이다. 복안이 있다면.

▲문재인 대표가 빠른 시일 내에 박지원 의원을 찾아가 만나는 것이 통합의 첫 걸음이다. 치열한 경선 과정에서의 앙금을 해소해야 한다. 문 대표는 친노 프레임과 대선 주자로서의 한계, 당심에서 취약하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놔야 한다. 스스로 불이익을 받는 모습을 보여야 진정성을 확보하고 통합을 이룰 수 있다.

- 국민 모임 등 신당이 구체화되고 분당론도 나오고 있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새정치연합이 민심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신당과 원심력이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통합의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중요하다.

- 4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최대 현안이다.

▲우리 당의 텃밭이라고는 하지만 야권 분열 구도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다. 선거 기획단을 조속히 구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여기에 지역 민심을 잘 살펴야 한다.

- 전략공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전략공천보다는 투명한 경선이 이뤄져야 한다. 원칙적인 문제다.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도 낙하산 전략공천은 오해와 갈등을 낳을 것이다.

- 야권연대에 대한 입장은.

▲이번에는 정치공학적 연대보다는 스스로 승리를 쟁취해야 한다. 야권분열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이제는 선의의 경쟁에 나서야 한다.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무소속 후보와의 연대는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 '문화전당 특별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은.

▲9일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당력을 총동원 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지역의 문제가 아닌 원칙의 문제다. 당연히 개정안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하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에 대한 입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문 대표가 사전에 최고위원들과 협의하지 않고 밝힌 것은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다. 일부 최고위원들이 개인적 소신을 내세워 참배를 거부, 결국 최고위원단 전체가 참배하지 않았다. 개인적 소신도 중요하지만 대의를 따라야 했다고 본다.

- 주 최고위원의 노선과 정체성은.

▲진보나 보수의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한다. 민생이 노선이고 정체성이다. 민생에서 비전과 희망을 제시해야 한다. 민생에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민생의 신뢰 없이는 새정치연합의 미래도 없다.

- 지역민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까지 저를 키워주신 지역민께 감사드린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다. 총선과 대선 승리의 밑거름이 되겠다고 약속드린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돈 선거 볏짚처럼 불타라"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30일 앞둔 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논에서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돈 선거' 근절을 위한 볏짚태우기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위약금 규모 '8600만달러+이자' 說
협상서 얼마나 깎을 수 있느냐가 관건

"F1 위약금"…전남도 대응방안은

F1 대회 주관사인 포뮬러원 매니지먼트(FOM)와 전남도, F1조직위원회와의 위약금 관련 협상은 이미 예견됐었다. 지난 2014년에는 개최권료를 둘러싼 양측의 협상을 통해 개최대상지에서 제외됐지만, 2015년 대회가 개최되지 않는 과정에서는 귀책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다소 애매했기 때문이다.

먼저 민선 6기 들어 전남도는 F1대회 지속 개최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이 같은 사실은 지사 직무인수위원회 인수보고서 등을 통해 공식·비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려졌다. 이에 FOM은 지난해 말 2015년 공식 스케줄에서 전남 영암을 개최지에서 제외·포함·제외를 반복하며 선뜻 이해할 수 없는 자세를 취했다.

그 과정에서 FOM은 지난해 11월29일까지 외국은행에 신용장(L/C)를 개설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으나 전남도는 2012년과 2013년에도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고 현금으로 개최권료를 지급했다는 점을 들어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근거로 개최권료 신용장 개설을 두고 양측이 마찰을 겪었으며, FOM 측이 지난해 말 결국 '중대한 계약사항 위반'을 정식 문건으로 통보해온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F1 조직위는 "외국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면 곧바로 FOM이 인출해가버린다"며 FOM 측이 무리한 요구를 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FOM의 협상에서 거론될 수 있는 안건은 ▲대회 미개최에 대한 귀책사유 및 위약금 지급 여부 ▲2016년 대회 개최 여부 ▲당초 대회 개최 기간(7년) 연장 여부 등이다.

우선 위약금 여부와 관련 전남도는 그 규모는 밝힐 수 없으나 계약서상 위약금이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위약금 규모가 '2년치 개최권료(8600만 달러)+이자'라는 주장도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F1 대회와 관련 위약금 지급이나 그와 관련된 소송이 없었다는 점도 전남도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2016년 대회 개최 여부는 위약금 지급 안건과 연동되면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거액의 위약금을 지급하는 대신 대회를 한 차례 치르고, FOM과의 계약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대회 기간 연장 안건도 정리될 수 있다.

F1 조직위 관계자는 "(FOM이)무리한 요구를 하면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외부에 협상 내용을 알려 여론에 맡기는 등 여러 가지 전략을 구상중이다"며 "협상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

F1 조직위는 이달 말 또는 2015년 F1대회 개막일인 오는 3월15일 이전에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협상 결과에 대해서는 비공개 합의안을 제외하고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한편 광주일보가 전남도와 F1 조직위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청구해 건네받은 '2008~2014년 F1 관련 예산 집행 현황'에 따르면 전남도는 서킷(5.615km), 스탠드(11만8351석) 등 주요시설과 카트경주장, 오토캠핑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데 국비 728억원, 특별교부세 110억원, 도비 3447억원 등 4285억원, 연도별 대회개최비와 경상운영비로는 각각 1675억원과 1097억원 등 모두 8752억원을 집행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지자체 복지비 2006년 15조→2013년 37조

연평균 14%씩 2.5배 증가
광주·전남 5배· 2.5배 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회 복지 지출액은 2006년 15조3000억원에서 2013년 37조4000억원으로 약 2.5배 늘어났다. 광주·전남지역도 2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각각 5배와 2.5배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9일 발표한 '지방재정의 건전화를 위한 복지정책 개선방향' 제하의 보고서에서 이런 조사 결과를 내놓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려면 효율성이 높은 사업 위주로 복지 정책을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11~2013년 17개 광역 지자체의 30%에 해당하는 부산, 대구, 인천, 세종, 제주 등이 예산의 20% 이상을 빚으로 충당하는 등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나 사회 복지 지출은 해마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의 부채도 각각 1조5000억원과 1조7409억원에 이른다.

보고서는 2006년 15조3000억원에 머물던 지자체 사회복지 지출액은 2013년 37조4000억원으로 늘어나 연평균 증가율이 13.8%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광주시는 2000여억원에 머물렀던 사회복지비가 1조500여억원으로, 전남은 7000여억원에서 1조6400여억원으로 증가했다.

허원제 한경연 연구위원은 "복지정책의 확대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복지정책의 이행 시기나 수혜 대상 등을 조정하고 있으나 올해부터 조정된 국고보조사업의 국고기준보조율 수준이 지자체 요구에 미치지 못해 재정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지방정부의 재정건전성 향상을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검토하고 우선 순위에 따라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허 연구위원은 "한경연이 2008년에서 2012년까지 분야별 복지정책이 지역경제의 성장률, 고용·실업률, 소득불평등도에 미친 효과를 17개 광역 시도를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노동, 보건의료, 노인·청소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순으로 복지정책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분야를 중심으로 복지정책의 우선 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